

광주 서구, 주정차 과태료 특혜 2000명

2018~2020년 '광주 서구 주·정차 단속 실태' 특정감사 마무리

서구 의원 4명...직급·현직 여부 불문 공무원 69명 연루 '과장'

'비공직' 4132건 중 2000여 건 이상...'과도한 재량 행정' 판단

광주 서구가 최근 3년 간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에서 현직 기초의원·공무원 등을 포함한 2000여 명이 특혜성 과태료 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특정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장(4급)급 전직 공무원부터 공무원 직위까지 직급 고하와 전·현직을 막론한 공직 사회와 이들의 지연·혈연·학연까지 부당한 특혜를 누려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특권과 반칙이 일상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월31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광주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8일간 벌인 '서구청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실태 특정감사'로 최근 3년(2018~2020년)간 부당한 처분 또는 과도한 재량 남용 등으로 2000여 건 이상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우선 시 감사위는 서구의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가 불투명했고, 엄정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공직자의 경우는 특혜성이

다분했고, 비공직자 수 천명에 대해서 과태료 단속 행정이 느슨했다고 봤다.

당초 서구가 지난해 12월 공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3년간 단속 자료 삭제 청탁을 통한 부당 특혜를 누린 기초의원과 전·현직 공직자(공무원·공무직·기간제)가 70명(140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구의원, 서구 공무원(5~9급)까지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 퇴직 공무원도 국장급 등도 다수 있었다. 공무원 직위·기간제 근로자도 상당수였다.

시 감사위는 이 중 69명(96건)은 부당한 수단으로 단속 무마 특혜를 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의회 의원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4명이 부당 특혜가 드러났다. 서구의회 의원 13명 중 30.76%에 해당한다. 이 중 상당수는 당초 연루 의혹을 줄곧 부인, '거짓말' 논란도 있다. 퇴직 공무원 중에선 4급 이하 간부 공무원이 다수였다. 현직 공무원 중에

선 5급 이하 공직자가 직급 구분 없이 고루 연루됐다.

그러나 부당 특혜 단속 건수가 당초 서구가 발표한 140건에서 96건으로 줄어든 데 대해서 일정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청 주관 행사를 열 경우, 단속 부서인 교통지도과가 각 부서에 '행사장 주변에 단속을 일시 면제한다'고 알렸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단, 교통지도과가 관련 공문을 발송한 경우에 한했다.

시 감사위는 감사 범위를 확대, 같은 기간 서구가 단속 자료 삭제·보정 등을 통한 과태료 부과 면제 조치를 받은 4132건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

이 중 2000여 건 이상의 과태료 면제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경우엔 서구가 관련 법령이 자치구에 위임한 단속 권한 범위를 과도하게 행사한 사례로 확인됐다.

서구는 현재까지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 부과

고지서 송달(7일) 기간 중 또다시 같은 구역에서 적발됐을 경우엔 중복 부과하지 않았다.

서구는 상무·금호·풍암지구 등 도심 중심기능이 밀집해 있어 적발 사례가 타 자치구보다 월등히 많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처분이 민생 경제에 부담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느슨한 행정을 펼쳤다.

그러나 일반시민 중 상당수는 과태료 단속 행정의 이 같은 허점 등을 미리 알고선 불법 주정차를 일삼았다는 의혹도 파다하다.

그럼에도 시 감사위는 이 같은 행정이 타 자치구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행정 재량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고, 관련 내규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위는 조만간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구로 보내 위법 및 부적절 행정 사례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관련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조치(징계 등)를 권고한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앞서 "주정차 업무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무단 면제 처리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감사 조치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정기자

완도해경, 봄철 농무기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단계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봄철 불안정한 날씨로 인한 개릴라성 짙은 안개가 예상됨에 따라 3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연안 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관심'→'주의보'→'경보'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중 '관심'단계는 과거 특정 시기에 안전사고가 집중·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그 위험성을 미리 알리기 위한 제도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농무기 기간은 짙은 안개로 인한 해상추락, 고립, 익수 사고가 잦은 시기만큼 선박종사자와 관광객 등 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영남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의 부주의인 만큼 국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상사고 취약지역과 연안사고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광주 남부소방, 봄철 들불·산불 주의 당부

광주 남부소방서는 건조한 기후·바람 등으로 들불·산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들불 화재는 총 6538건 발생했다. 들불 화재의 원인은 부주의가 95%(618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서 쓰레기소각이 2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 화재의 절반 이상(55%)이 2월에서 4월 사이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 5년간의 산불 5553건 중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 소각을 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는 37%(2050건)에 달했다.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면 불길의 커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바람으로 임야·산림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등 부주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홍희기자

무안소방, 든든한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로 지켜낸 이웃사랑

지난달 9일 88세의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거주하는 무안군 해제면 한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으나 이웃들의 도움과 소방서에서 보급한 기초소방시설을 활용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당일 오전 7시 48분경 박정영(여, 66세)씨는 할머니 집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화재감지기의 소리를 듣고 뛰어들어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며 불이 났다고 알리고 119에 신고했다. 할머니 집 바로 앞집 이웃은 이 소리를 듣고 본인 집에서 가져온 소화기로 보일러실에 가득한 화염에 분사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큰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는 보일러실에 가득한 그을음과 잔불만을 정리하고 그대로 두었을 경우 거동 불편한 할머니의 인명피해는 불가피했을 것이라며 박씨와 이웃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씨는 "평소 화재를 대비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덕분에 어렵지 않게 할머니를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며 더 이상의 칭찬을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리고 위험물 무류쓰며 소화기를 사용한 이웃은 칭찬받는 것도 경계하고 인터뷰를 피했다.

초기 주택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무안소방서와 무안군은 불이 난 할머니집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를 이미 보급한 바 있어 적절한 행정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지켜낸 우수 사례로 꼽힌다.

무안소방서장(박원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신속한 초동조치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이웃들에게 표창 수여를 추진하겠다. 집집마다, 방방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큰 재산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며 이번 이웃들의 용기를 다시 한 번 칭찬했다.

무안=이기성기자

나주교통 결행 꼼수...나주시 "불법행위 엄중 대응할 것"

보조금 집행 회계감사·지난해 전체노선 결행 조사 병행



전남 나주시가 상습 무단 회차, 노선결행 논란이 제기된 지역운수업체(㈜나주교통)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나주시는 해당 업체의 지난해 전체

노선버스, 안심귀가버스 전수조사와 병행해 최근 2년 간 업체에 지원한 손실보전금(재정지원금) 불법 집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3월31일 밝혔다.

회계감사와 함께 실시 중인 이번 실태조사는 매년 손실보전금 증액 배경과 원인 분석에 집중된다.

조사 결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 전액 환수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에 이어 재발방지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5년 간 나주시가 ㈜나주교통에 지원한 손실보전금 증가액은 2017년 34억3400만원, 2018년 37억9400만원, 2019년 9억5300만원, 2020년 5억3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지원금 증액 사유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권장한 '운송원가 산정 방식'에 따라 임금과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여기에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정주(교통) 여건 개선 민원과 남평강

변 신도시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노선 신설, 버스 증차 등으로 지원금 매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원금 적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전문회계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현재 최근 2년 간 업체에서 제출한 손실보전금 적법사용 여부를 정밀 조사 중이다.

노선운행 조사는 나주교통에서 제출한 전체 버스 운행 자료와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정밀 대조해 오는 9월까지 실제 노선 결행을 얼마만큼 했는지 정확히 밝힐 방침이다.

앞서 나주시는 나주교통 노조가 제보한 '노선 결행 폭로 건'을 조사한 결과 총 39회 결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8일 업체 측에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